

일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공식사죄 및
피해배상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의안 번호	1369
----------	------

제안연월일 : 2012. 8. 28.

제안자 : 외교통상통일위원장

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일본 정부가 당시 조선인 여성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의 여성들을 위안부라는 이름 하에 성노예화 한 것에 대하여 깊은 분노를 표시하면서,

그간 대한민국 국회 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의회 등 여러 국가들이 위안부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아울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고령으로 인해 생존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 피해배상과 진정한 명예회복을 위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일본 정부가 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 및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스스로의 책임인정을 기초로 조속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법적으로 피해를 배상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각국의 여성들을 강압 등에 의해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노예적 착취를 자행한 것은 인류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범죄행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일본정부의 몰역사적 인식과 행태를 방증하는 것으로, 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형성에도 걸림돌임을 엄중히 경고하며, 책임 인정 및 진실 규명과 더불어 진정한 반성과 참회의 토대 위에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법적으로 피해를 배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와 같은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수용하고, 과거 불행했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에 대한 올바른 역사교육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책임 인정과 사죄 및 법적인 피해배

상, 그리고 올바른 역사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일 간 협의와 국제사회에의 문제제기 등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일본 정부가 당시 조선인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 여성들을 강압 등에 의해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노예화한 행위에 대하여 아직까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공식적인 사죄와 법적인 피해배상도 하지 않고 있음.

특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대부분 고령이라는 점에서 조속한 문제 해결이 필요함에도 일본 정부는 이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바,

일본 정부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진정한 반성과 참회의 토대 위에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조속히 피해를 배상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일본군 위안부와 같은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내용을 역사교과서에 충분히 기술하고, 올바른 역사교육을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임.